

文-安 충돌…야권 거국중립내각 혼선

<재인> <철수>

文 “권력 이양” 발언 논란

국민의당 “현실성 없어” 비판

민주당 의총 찬반 의견 팽팽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 국면에서 야권이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수권 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당장, 국정 정상화 방법의 하나로 부상한 거국 내각의 방법론을 놓고 야권은 분열과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과 1일 잇따라 열린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에 호응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주도해야 한다는 논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민주당은 일단 매일 의총을 열어 거국 중립내각을 중심으로 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 ‘선(先) 진상규명’의 명분 아래, 선불리 거국내각 논의를 띄워 초점을 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관망 태도가 오히려 정국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수권 세력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야권의 만행으로서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리더십과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대권 선두주자인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거국내각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이양 논란을 부르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전날 ‘박 대통령이 총리에 게 국정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고 국회

에 총리 추천 요청한 뒤, 총리 제정으로 내각 구성해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뒤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대통령 하야’ ‘권력 이양’ 주장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우상호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대권 후보의 입장은 당의 입장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전 대표 측도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에 국정 권한 상당 부분을 위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

망이다.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의 거국내각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취지로 평가하면서 ‘권력 나눠먹기’로 비친다고까지 비판하기도 했다.

안 전 대표는 수습 방안으로 ‘여야 합의 총리’를 제안했다. 교섭단체인 3개 정당이 합의로 총리를 먼저 세운 뒤 총리가 헌법에 따라 각료를 추천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문 전 대표는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며 이런 말

을 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 하야하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느냐”고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따라 야권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동과 관련, 소통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거국 내각 구성 논란에 휩쓸리면서 수권 세력으로서의 동력을 잃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진상규명 먼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최순실 진상규명 국민보고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박 11년만에 해체 수순…‘제2의 폐족’ 되나

서청원·최경환 침묵·잠행

이정현 대표는 사퇴 압박

일부 의원 친박 꼬리표 떼기

보수층의 가장 강력한 정치계파로 위세를 떨쳐온 새누리당의 친박(친박근혜)계가 ‘폐족’ 위기에 몰리고 있다.

친박계는 지난 2005년 제1야당의 주류로 시작해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내 야당’을 거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여권의 명실상부한 주류가 됐지만 4년 만에 ‘친노(친노무현)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박 대통령이 유일한 계파 존재의 의미였던 친박계가 존재 근거를 잃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의 친박 핵심 참모들이 모두 퇴진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여당 내의 친박 핵심 인사들도 현 정부 들어 최대의 정치적 고비를 맞고 있다.

친박계의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은 입을 다문 채 잠행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친박연대’란 정당을 창당한

이래 친박의 만행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 최대한 몸을 낮춘 상태다. 이정현 대표를 위시한 친박 지도부는 이미 당내 많은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특히 친박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의원 중에는 친박계 또는 범친박계로 분류돼온 이학재·이만희·유익동·김순례·김종석·김현아·성일종·송석준·송희경·정유섭 의원 등까지 포함돼 이른바 탈박(脫친박)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1일 “친박계의 결속력이 순식간에 느슨해지면서 조직이 와해하는 분위기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친박계에 이정현 대표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일부 핵심 인사 몇 명만 남다가 결국 사실상 소멸 단계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친박계 상황은 지난 2007년 친노계의 ‘대자부’로 보는 시각이 많다. 당시 친노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소멸위기에 몰리면서 야당인 한나라당과 여당 내 비노(비노무현)계로부터 ‘폐족’으로 불리었고 친노계 일각에서도 “우리는 폐족”이라고 인정하는 등 현재의 친박계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다. 다만, 친노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재기에 성공, 현재는 제1야당의 주류로 부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순실 국정 농단 ‘블랙홀’ ‘호남 예산 배려’ 실종 우려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에 정국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치권이 내세웠던 내년 예산 심의에서의 호남 배려가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우선 서진(西進) 정책과 함께 호남 예산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으로 당내에서 퇴진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친박과 비박 진영의 전면전 상황에서 호남 예산 챙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정현 대표를 제외하고 새누리당에서 호남 예산을 챙길 만한 인사를 찾아보기 힘들어 예산 국회에서 여당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도 최순실 파동으로 아쉽게 준비했던 ‘호남비전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미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위원들을 선임한 것은 물론 민주당이 챙겨야 할 호남 현안 사업 순위까지 마련했으나 좀처럼 발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파동 국면에서 호남비전위원회 발족에 나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것은 최순실 파동으로 정치권의 이적투구가 이어진다면 호남 비전 위원회의 발족 여부는 물론 제대로 가동될 것인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이미 호남비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발표 시기를 보고 있는데 최순실 파동으로 좀처럼 적절한 시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미에 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호남 예산 챙기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2기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 차질을 빚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도부가 구성돼야 당 차원의 호남 배려 움직임이 가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선임되면 박지원 원내대표와 호남 현안을 챙기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 확정을 위해서는 제3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여야의 이견을 조율하면서 호남의 현안 예산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회찬 “대선 내년 봄으로 앞당겨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혼란 수습 방안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내년 말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이같이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 오늘, 내일 하야한다기보다는 대선일정을 내년 봄 정도로 앞당기고 그때까지 중립적인 선거관리 내각이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 공백 상태도 막고, 무엇보다 헌법에 의거해서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수습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국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고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통치 불능상태”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새 비대위원장 ‘김병준 카드’ 제동

국민의당이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세우는 방안에 급제동이 걸렸다. 그가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교수가 언론에 “(총리) 제안이 오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며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이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겠다는 생각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느

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를 설득해 영입하는 데 앞장섰던 안철수 전 대표 측도 김 교수 영입 작업을 중단하는 듯한 분위기다.

여기에 안 전 대표가 김 교수의 영입에 부정적인 호남 중진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들어갔지만, 여의치 않은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의 영입작업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차기 비대위원장 선출 구도가 오리무중 상황으로 변했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대 상 자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대출금리	4.7% ~ 4.9%
대출기간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